

일감 알선·취업 보장·외국 대학 편입 등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



학원 이용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생을 현혹하거나 수강 신청 시 학원측이 약속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 학원 이용과 관련된 전형적인 피해 사례를 통해 학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대응책을 모색한다.

- 글/문영숙(객원기자)
- 도움말/박현서(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 양종석(생활경제국)

전형적인 학원 피해 사례

사례 1

1년 치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은 후 중도 해약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최모씨는 지난 해 8월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영어강사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1년 과정을 신청, 1년 치 수강료 88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막상 강의가 시작되자 학원측에서 애초 약속한 사실이 대부분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외국인 강사 3명, 15명 정원제, 매 시간 반이 개설돼 있어서 어떤 시간이든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강신청을 받으며 학원측이 약속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강사는 한 명뿐이었고 15명 정원 제라던 한 반에 30명이 끼어 앉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게다가 반 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도 없었다.

결국 최씨는 5개월만에 학원 수강을 포기하고 잔액 환불을 요구했다. 학원 원장은 납부한 88만원이 학원 수강료가 아닌 교재 대금이라며 77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1만원만 환불해 주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했다. 12권 교재 중 사용한 교재는 4권.



그러나 책 손상 정도가 83%여서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

황당해하던 최씨가 처음 약속과 틀린 수강 조건을 비난하자 원장은 “말을 그렇게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고 말한 후 양보라도 하듯 교재 손상 정도를 65%로 쳐주겠다고 했다. 결국 최씨는 57만원을 빼고 나머지 30만원밖에 환불받을 수 없었다.

사례 2

아르바이트 미끼로 수강생 모집한 후 고액 학원비만 챙기는 경우

일 자리를 찾던 김모씨는 집 근처에서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벽보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광고를 낸 곳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컴퓨터 학원. 학원측에서는 일을 하면서 6개월 간 컴퓨터 강좌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 말을 믿은 김씨는 학원 수강료 1백3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20일이 지나도록 아르바이트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김씨는 아르바이트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원을 다닐 수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결국 학원측이 아르바이트를 주선했던 주기는 했지만 처음 학원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보수가 터

무ნი없이 작았다. 신용카드를 미리 결제한 학원 수강료는 고사하고 교통비와 점심값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액수였던 것.

참다못한 김씨는 처음 약속과 다르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학원측에서는 수강도 하지 않은 학원비 2개월분과 교재 대금 등 모두 86만원을 채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학원비로 결제한 카드대금이 매월 김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례 3

일감 알선해 준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

조모씨는 일간지에 게재된 ‘번역-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A4 한 장 번역에 1만5천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1번역사 연구원에 전화를 걸었다. 학원측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번역실습 교재를 제공하고 일감을 알선해 준다는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일감 알선을 거듭 약속받은 조씨는 회비 45만원을 납부하고 번역실습 교재 52권을 배달 받았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학원 측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일감을 알선해 주지 않았고 조씨는 해약을 요구했다.

조씨의 해약 요구에 회비 명목이던 45만원이 교재비용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교재를 이미 사용했으니 해약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서모씨도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당한 경우. 학원측은 번역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 계속 시험정보를 제공하고 침삭지도를 해준다는 회원 가입비 46만원을 요구했다. 물론 자격증을 딸 때까



지 아르바이트로 번역 일감도 주선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일감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솔깃해 회원으로 가입했던 서씨는 이후 단 한번도 번역 일을 의뢰받지 못했다.

사례 4

‘취업보장’ 장담한 후 책임지지 않는 경우

일본 와세다 대학 일문과를 졸업한 김모씨는 얼마 전 서울 S어학원의 일본어 회화 강좌에 등록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학원 강사를 신청한 이유는 68만원짜리 일본어 강좌를 들으면 일본어 번역 일을 알선해 주겠다고 학원측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약 일거리를 주지 못할 때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강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김씨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일감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학원측이 하는 답변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는 것. 언제까지라는 시한 제시도 없이 그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수강료 환불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회사원 정모씨도 외국인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학원측의 말만 믿고 6개월짜리 영어회화 과정을 신청, 6개월치 학원비 62만원을 납부했다. 6개월 과정이 끝난 뒤 학원에서 소개한 일자리는 금융회사 딜러직이었다.

경영이나 회계 전문가가 아니면 취업이 어려운 직종이었으므로 정씨가 입사시험에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도 학원측은 '약속대로 취업을 알선했는데 떨어진 것은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며 수강생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피해 발생시 바로 소비자 보호 단체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 방법 찾아야

■ 박현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학원 광고의 경우 수강생을 현혹하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격증과 관련된 학원일수록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교재를 구입하기 전 정부 해당 부처에 반드시 자격증 시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할 때도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고 사전에 해약 조건이나 취업·일감 알선 조건 등을 확인한다. 특히 수강료 명목으로 학원비를 받고도 중도에 해약 의사를 밝히면 교재비였다고 우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납부하는 학원비의 명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상에도 명기해야 한다.

교재비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도에 해약하려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카드회사를 찾아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할부거래법에 명기된 내용으로 학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피해 발생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바로 소비자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든 학원측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끌게 된다. 그 사이 철회권을 행사할 기회도 놓치고 스스로도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보호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빨리,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사례 5

학원에서 학점 이수하면 외국 대학으로 편입시켜 준다고 속이는 경우

대학입시에 실패한 정모씨는 국내 학원에서 2년간 학점을 이수하면 미국 대학 3학년으로 편입시켜 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K전산학원을 찾았다.

학원측에서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의 콘코디아 대학과 자연결연을 맺고 있다고 했다. 학원에서 2년간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등을 공부하면 콘코디아 대학 3학년으로 편입시켜 주겠다고는 것.

그러나 정씨는 학원측의 설비나 강사진이 형편 없어 보이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등록하기 전 교육부에 문의했다.

교육부에서는 학원의 학점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콘코디아 대학에 유학해도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원 피해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학원에서는 일단 수강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거짓 설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학원 측의 설명만 믿고 등록했다가는 후회하기 십상. 따라서 학원 측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그 내용을 반드시 기존 수강생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 **6개월 · 1년 코스를 신청할 때는 며칠간 강의를 들어보고 결정한다** : 장기 등록을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강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원하는 시간대가 없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기 등록을 할 때는 며칠간 강의를 무료로 수강해 본 뒤 결정한다.

• **장기 수강 신청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다** : 장기 수강 신청시 학원측에서는 일시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장 목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수강생들이 많은데 중도에 학원을 그만 두더라도 환불받기 어렵다.

학원측과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카

드대금은 계속 청구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차라리 현금분할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신문 · 잡지에 게재된 학원 광고를 주의한다** : 속기사 · 번역사 · 물류관리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일수록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예가 빈번하다. ‘취업보장’ ‘1백% 자격증 취득 확실’ ‘일감 알선’ 등을 내세우는 학원 광고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 **학원 등록시 서면으로 계약하고 학원측의 서명을 받아둔다** : 학원 등록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학원측의 설명과 실제 사항이 틀리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수강생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원측에 요구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 학원측이 거부할 경우 수강생이 학원에서 들은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학원측의 서명을 받아두면 피해 발생시 증거자료가 된다.



• **허위 과장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둔다** : 계약 조건이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반드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더라도 수강생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때 학원측은 이미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사전에 이런 사항을 수강생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원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전단 · 잡지 · 신문 광고 등인데 소비자 보호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⑤

